

## 2019 년 국가인권보고서: 대한민국

### 요약

대한민국 (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 체제로 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이다. 2017 년 치러진 대선과 2016 년에 치러진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6 월에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렀다.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경찰청은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문민정부는 보안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중대한 인권 현안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존재, 군대 내 성인 병사들의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 그리고 부패가 있다.

12 월,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 방안을 제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금, 기소, 수감을 중단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일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12 월 30 일 기준 935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판결이 아직 미정 상태다.

정부는 권력 남용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 조치를 취했다.

### 제 1 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 A.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 B.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하거나 정부 당국을 대리하여 행해진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굴욕적인 대우와 그 처벌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일부 보고가 있다. 비정부기구인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의 몇 가지 사례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비정부기구들은 괴롭힘이 군대 내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비정부기구들과 언론이 제기한 신뢰할 만한 사례로 볼 때, 병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7 월에 한 병사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선이 남한 수역에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경계 실패로 소속 부대가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되자 자살했다. 언론 보도는 사건 이후의 징계 조치가 이 병사를 자살로 몰고 간 것으로 추측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이전에도 선임병과 동료들이 해당 병사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주기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망 원인을 단순히 북한 어선 사건만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북한 어선 사건이 이 병사로 하여금 자살을 감행하게 만든 실질적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박하며, 해당 병사는 북한 어선 사건 발생 시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그의 자살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타 다른 종류의 가혹행위로는 병사들이 한 병사로 하여금 변기를 활게하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한다거나, 부대 내 상관인 성소수자 (LGBTI) 병사들의 성적 지향을 다른 동료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사건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2017 년과 비교해 2018 년에 군대 내 발생 사건의 신고가 구타 (23.6%), 언어 폭력 (12.5%), 성범죄 (67%), 권력 남용 (9%)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군이 항상 전면적인 수사과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보다 피해자들을 전보 조치하여 이들이 오히려 표적이 되곤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5 년 이래로 매년 인권교관을 양성해왔다. 국방부는 훈련을 받는 인권교관의 수를 전년도인 600 명에서 약 800 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홍보원과 공동으로 인권 교육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군에 배포했다.

8 월, 대구의 인권 센터는 대구의 한 교도소가 성소수자 수감자의 성적 지향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로하고 적절한 사유없이 해당 수감자를 폐쇄회로 TV 가 설치된 독방에 수감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해당 교도소는 성소수자 수감자는 다른 이들과 격리 수용해야 한다는 법과 정책에 따라 이 수감자를 독방 수감 조치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법은 성적 지향을 토대로 수감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와 관련하여 인권문제가 제기된 중요한 보고는 없었다.

시설 여건: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 가혹행위나 시설 여건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는 없었다.

60 개 항공사 회원들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이민자와 난민신청자 등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위한 '출국대기실'을 설치했다. 출국대기실 운영은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자는 변호인을 접촉하거나 입국불허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2018 년 하루 평균 106 명이 이곳을 이용했으며, 98 퍼센트가 4 일 이내에 출국했다. 출국대기실의 1 일 수용가능인원은 약 60 명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대기실에는 남녀가 구분된 대기실, 침실, 샤워실이 갖춰진 화장실, 텔레비전, 무료 와이파이, 소파, 공중 전화, 정수기, 담요가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특히 수개월 동안 장기 수용되는 대기자들의 경우 출국대기실의 생활 환경이—사생활 보장, 침구, 의료시설 부족으로—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자들은 개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부 대기자는 하루 세 끼를 패스트푸드만으로 해결했으며,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다른 대기자나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 법무부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수감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구제절차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수감자는 법무장관에게 직접 청원하거나

법무부 산하 인권침해신고센터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1월부터 7월까지, 33건의 직권남용 관련 청원이 법무장관 앞으로 접수되었다. 이중,  
30건이 종결되었고, 직권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었다.

독립적인 감시: 교도소 시설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정부기구들은 인권 침해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해 교정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 요건을 준수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을 위협하고 구금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법에 의거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수사한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부실한 감독 체계로 인해 국정원이 임무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발부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 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 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 일 연장할 수 있다. 8 월,

대검찰청에서는 영장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크메르어, 우르두어, 미얀마어를 포함한 15 개국어로 발부하기 시작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자의적 체포: 법무부는 1 월부터 7 월까지 국가보안법에 따라 2 명이 체포되었다고 보고했다. 7 월, 경찰은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존중했다.

### **재판절차**

헌법은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무죄추정의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받아 혐의 내용을 즉시 통보받을 권리, 변호사 접견권 (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정 출석권, 항소권 등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된다. 피고인에게는 소급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보장되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판사는 본인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법적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신청을 필요로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증인에 대해 교호신문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진술하거나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수 있다.

## 정치범 및 피구금자

법무부는 현재 정치적인 신념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쟁의 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월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 전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재 통상적인 군 복무 기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44개월의 대체 복무를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은 2020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12월,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 시설에서 36개월간의 대체 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 전에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법률의 통과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병역 거부에 따른 유죄 판결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 879명을 사면했다. 정부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즉각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금, 기소, 수감을 중단했으나, 검찰은 무죄 방면된 일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등 진실성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12월 30일 기준, 2018년 6월 이전에 시작된 93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었으며, 이 중 63명은 최초 군 복무가 아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였다.

##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 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과 단체는 국내 인권 기관과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잘못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사법적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

그러한 침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법에 의해, 정부가 범죄 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 간의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규정되어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7일이내에 그리고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주요 활동 사항, 여행 계획, 가족 관계, 직업, 재산 상태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정부가 그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 및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와 북한 위성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구독과 조선중앙통신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금지된다. 그러나 본 금지 규정의 집행 사례는 드물었다.

국회의원과 비정부기구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감청 및 개인 정보 수집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부터 7월 사이, 법원은 37건의 감청 요청을 허가했는데 이는 2018년 동기 대비 50퍼센트 줄어든 것이다.

9월 현재,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사찰 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었다. 2018년 9월, 당국은 2014년에 침몰한 세월호와 관련하여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구속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부대원 60명을 동원하여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한 혐의로 소 전 참모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대외이미지를 유리하게 조성할 목적으로 박근혜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군은 민간인 사찰 연루 등을 이유로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일부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 권한 범위도 제한하고 대폭 확대된 민간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 제 2 절. 시민의 자유의 존중

### A.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률, 헌법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시행은 아래에 기술한 것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했다.

표현의 자유: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에 입각하여 '반국가'적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당해연도 중에도 북한에 동조하거나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례가 이어졌다. 1월부터 7월까지 북한에 대한 찬양 및 동조로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에는 이같은 사례가 9건이 있었고 2018년에는 1건이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기타 법들을 예로들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 월에는 한 지방 법원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2 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이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표현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죄에 따른 6 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 법원은 또한 해당 교수를 파면한 국립 순천대학교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수는 위안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수업 시간에 역사적 사안에 대한 활발한 학문적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간주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언론과 매체: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제한범위 내에서 다양한 관점을 표현했다.

3 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2018 년 9 월 블룸버그 기사를 두고 해당 기사를 비판한 일이 있었다. 이 대변인은 그 다음 날, 이와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의 기자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사과했고 해당 기자들의 이름을 발표문에서 삭제했다.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명예훼손죄 및 특히 북한에 관해 민감한 정보를 퍼뜨릴 경우 엄격한 처벌을 당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보수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 매체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있다. 동법은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을 드러낸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 최고 형량은 징역 2 년이다. 비정부기구 및 인권 변호사들은 일부 정치인, 정부 관리 등 유명 인사들이 동법을 이용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를 저지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1 월, 한 영화 감독이 자신이 영화 촬영 중에 여배우를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기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감독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감독은 해당 언론사와 여배우 한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0 억 원 (83 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 월 현재, 해당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국가 안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지지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을 체포하고 수감하거나 외국인을 추방하는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2015 년에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 합치 결정을 내렸다.

7 월, 한 지방 법원에서는 이슬람국가 (ISIS)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혐의의 시리아 이주민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각했다. 이 사람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 10 년 이상 이 곳에 살고 있었다.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 사람이 아이의 출산을 위해 중동 지역에 방문했을 때 이슬람국가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화기에 이슬람국가 관련 모집 자료들을 저장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는 해당 자료가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자동 저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방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특정 방법을 제시해 이슬람국가에 가담하도록 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한 동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검찰은 2018 년 1 심 판결 파기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고, 11 월 현재 해당 사건은 여전히 계류중이다.

##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감시했다.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 월부터 9 월까지 유해하다고 판단된 14 만 3 천 681 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는 주로 도박 (2 만 3 천 45 개), 불법 식품 및 약물 (2 만 810 개), 음란물 (1 만 3 천 623 개)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트위터에 게시된 상당수 북한 체제 선전 웹사이트도 차단됐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 중에는 신체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문서 위조, 지적재산권을 위반하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혹은 채팅방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한이 있다. 금지된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될 수 있다.

대형 웹사이트에 온라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가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 실명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교사에게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치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노래의 가사 등을 심의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노래를 금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및 인터넷 통신에 관한 윤리 기준을 유지, 관할한다.

##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평화적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법에 의거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를 금지했다. 경찰청의 시위 금지 결정은 행정적·사법적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2018 년, 경찰청은 총 6 만 8 천 315 건의 집회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는 2017 년 대비 51 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8 월, 제 3 회 부산 퀴어문화축제가 주최측에 의해 취소되었다. 주최측은 해운대구청이 도로 점용을 불허하면서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부산 당국이 성소수자 반대 단체의 요구에 따라 축제의 개최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구청 부구청장은 축제 주최측이 관할 경찰에 적절한 허가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주최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최측이 사용하려는 해운대 해변은 주요 관광 도로로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두 차례 열린 부산 퀴어문화축제는 같은 장소에서 만 5 천명의 참가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개최되었다. 해당 도로는 또한 해마다 6 월 부산 세계마술챔피언십과 9 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도 열리는 곳으로 각각 2 만 여 명의 참가자들이 몰렸다.

###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 D. 이동의 자유

국내 이동, 해외 여행 (북한 제외), 이민, 송환의 자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해외 여행: 북한을 방문하는 시민은 반드시 통일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E. 국내 실향민

해당사항 없음

### F. 난민 보호

이주자, 난민, 무국적자에 대한 가혹행위: 현지 비정부기구들은 신체적 가혹 행위, 여권 압수, 열악한 주거 환경, 성폭력 등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행해진 가혹 행위 사례들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HCR)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의 제한적 협력을 통해 난민, 복귀 난민, 난민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했다.

6 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가들은 난민 신청자들의 공항 내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일례로, 9 월 현재, 앙골라 출신의 부부와 그들의 네 자녀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8 개월 이상을 체류했다. 이들 가족은 2018 년 12 월 한국에 도착, 앙골라 경찰에 의한 고문과 성폭력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1 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명백한 이유가 없고,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지위를 획득하려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사전 심사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공식적으로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4 월에 열린 1 심에서는 기각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가족을 방문한 한 기자는 이들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으며 출국하는 승객들이 주는 식료품과 생필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별도의 법률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 또는 망명통계에 탈북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는 탈북자 혹은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집행 예산이 전년도 대비 80 퍼센트 줄어들었다.

6 월,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지출에는 새로 입국한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운영 비용과 탈북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기타 모든 제반 지출이 포함된 것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산하 10 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 심사 담당관의 수는 9 월 현재, 2018 년 39 명에서 94 명으로 증가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전부터 난민 심사 담당관 인력 부족을 증가하는 난민 신청 수용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해왔다. 1 월부터 7 월까지

종료된 사건들 기준으로, 법무부는 난민 신청의 1 차 심사 완료에 걸린 시간이 평균 12.3 개월로 줄어들었고, 2 차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11.3 개월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입국시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에 난민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 건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난민, 난민인정심사를 기다리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82 명이였다.

법에 의해 난민 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난민 신청자는 정부에 통역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비정부기구와 난민 신청자들은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통역인이 보호를 요청한 바로 그 해당 정부의 편을 드는 것을 우려했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6 개월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출신국가/경유국: 법은 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심사불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박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출신 국가나 안전한 제 3 국"으로부터 온 경우가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문화적·언어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난민과 이주민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수의 북한 출신 탈북자들과 타국의 난민 신청자들은 사회적 차별을 호소했으며 기초 생활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8 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탈북자인 42 세 여성과 여섯 살짜리 아들이 방에서 숨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지 두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모자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하나도 없었고, 수도 공급은 끊긴 상태였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10 개월 전 이 여성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7 월,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서 건설업을 제외시켰고, 해당 건은 현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8 년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552 명의 예멘인 중 대부분이 현재 이 나라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중 단 2 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난민 지위를 거절당한 대다수 신청자들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연장해 주었다. 예멘인들 중 약 400 명은 체류 허가를 받은 뒤 본토로 이주했다. 제주도에 남은 예멘인들은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본토로 이주한 사람들은 고용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내용들을 밖에 알려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당해연도 여러 차례의 만남에서,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예멘인들 그리고 비정부기구들 모두 소규모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대중의 격렬한 반대는 부정확한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6 월, 한 온라인 언론 매체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건이 예멘 난민과 연관이 있다며, 후티 반군 일부가 상수도를 일부러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기도 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은 '난민' 자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가 고문으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중대한 위협에 처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난민에게 제공되는 기본 생활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주거와 기타 생활 지원 면에서 비정부기구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인도적 체류자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군의 종류를 정부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저임금의 "3D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직종"인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정부가 임시난민지위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 G. 무국적자

해당사항 없음

## 제 3 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법률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원칙에 기초해 비밀투표로 치러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2017 년 대통령 선거와 2018 년 6 월 지방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은 조기에 실시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 41.1 퍼센트의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2018 년 6 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 17 개 광역단체장 중 14 개를 석권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정당과 정치 참여: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을 써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견해 표현과 정보 전달 그리고 선거운동 지원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선거법 조항과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여성이나 소수자의 투표, 공직선거 출마, 선거 감시, 기타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그들은 그런 활동을 했다.

## 제 4 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결여

법률은 공직자 부패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간혹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당해연도 중에 다수의 공직자 부패사건이 보고됐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사법 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부패: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5 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2 년차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에는 법무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 종합계획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체계의 수립, 군대 내 부패 방지, 그리고 공공 조달 부문의 부패 척결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관할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설립 이후 519 명이 연루된 124 개의 부패 사건을 적발했다. 124 건 중에 9 건이 기소되었고, 38 건은 수사 중이며, 506 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10 월 14 일 조국 법무 장관이 본인과 가족들이 그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는 딸의 학업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장관 임명 후 35 일만에 사임했다. 10 월 24 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가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1 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출국도 금지했다.

2 월,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경찰서가 나이트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 곳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 비리 수사의 결과, 클럽의 소유주와 유착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관이 체포되었고 다른 경찰관 한명은 클럽으로부터 2 천만 원 (1 만 6 천 600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 년에 처해졌다. 비평가들은 경찰이 권한 남용과 민관 유착이 아닌,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공개: 선출직을 포함,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을 비롯해 본인의 재산과 수입을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8 천 92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제 5 절. 국제 및 비정부 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어느 정도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부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정부 연락책이 인신매매 방지 촉구에 대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당해 연도에 정부 관계자들과 비정부기구 지도자들은

노동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선진사례, 정책, 기관간 협력에 대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해당 연수는 국내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새롭고 창의적 방법을 장려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검사, 경찰관, 노동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인권기구: 헌법에 명시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일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공공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당시 모든 정부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더 많이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내에는 인권 단체 대표 6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각 부처가 일반적으로 국가인권회의의 권고를 직접적이든 또는 추가 검토 이후이든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에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계적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내 언론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가 끝날 때 까지는 성소수자 이슈를 거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옴부즈만실은 독립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옴부즈만실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등 여러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법률에 의해 설립이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지체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해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회 구성원 추천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가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하는 즉시 재단을 출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대사직이 2017년 이래로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제 6 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강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법률은 강간죄를 폭행이 수반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은 가정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여 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5,81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접근 금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1만 6,6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또는 교정 치료 및 상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률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범죄자 재범자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증가 추세에 있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무부는 1월부터 7월 사이에 1건의 화학적 거세가 실시됐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사법제도는 효과적으로 법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간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명예훼손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 사건은 신고와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월에 서울 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018년 8월 하급심의 무죄선고를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강간과 기타 혐의 대신에 "위력에 의한 성관계"의 다수 항목에 대해 안 전지사의 유죄를 선고했으며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했다. 안 전지사가 자신의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3월 체포 및 기소된 사건은 한국이 강간을 합의의 부재가 아닌 "폭행 수단"을 근거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미신고율이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 년 248,660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7 년 대비 11 퍼센트 감소한 수치이다.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미혼 커플간 폭력신고는 2016 년 9,364 건에서 2018 년 18,961 건으로 두배 증가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40 퍼센트 정도가 21 세에서 30 세 사이였다. 피해자의 약 21 퍼센트는 16 세와 20 세 사이였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는 부처간 협의 촉진 및 대책 마련 조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들, 민간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24 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또한 8 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이 실지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무고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기로 했다.

6 월에 경찰은 두 살배기 자녀 앞에서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세시간 동안 폭행한 남성을 구속했다.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는데, 이는 외국인 신부와 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농촌지역 자치정부에 대한 전국적 논란을 일으켰다. 비정부기구는 해당 보조금이 "부인 매수"나 마찬가지로이며 외국인 신부들은 "자주 가정부나 성적대상의 역할을 [떠맡게 되어]" 인권침해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커플이 처음 만난 후 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평균 3.9 일이 걸린다는 사실과 신랑과 신부의 평균 나이차가 18.4 년에 이른다는 사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신부의 42 퍼센트가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으며 68 퍼센트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경험했다. 한국인 커플 간 가정폭력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아마도 국제결혼 커플보다는 다소 낮을 것이다.

8 월에 이주결혼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정 폭력범에게 결혼 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원 스트라이크"정책이 포함되었다. 국제이주기구는 "수사 의뢰 권한" 정책을 추가하는 것이 외국인 배우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정책은 별거 시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관계당국에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UNHCR)는 이것이 이미 불균형적인 국제결혼 커플의 권력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투 운동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는 2018년 3월에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의 전국 170개 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지원 및 치료, 사회복지사,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정부기관인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41,343건의 성폭력신고가 접수되었다(2017년 대비 33.7퍼센트 증가).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으나 남성 피해자들은 도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7월에 정부는 2015년 위안부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일양국정부의 합의 하에 일본정부의 십억 엔(9,100만 달러) 출연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미사용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성희롱: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7월에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청은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1년 내내 언론에 다수의 성희롱 사건이 보도되었다.

2월에 서울대학교의 한 여학생이 교수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다. 여학생에 따르면 해당 교수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어깨 마사지를 했으며 자신이 버스에서 잠들었을 때 머리카락을 만졌고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있는 상처를 교수에게 보여주지 않자 여학생의 치마를 들추고 다리를 만졌으며 억지로 많은 양의 술을 먹게 했다. 여학생은 17명의 다른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는 교수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여학생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며 학교에 해임을 촉구했으나 학교는 거부했다.

강압적 산아 제한: 강압적 낙태나 비자발적 불임 시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한다. 1 월에 문 대통령은 성별 격차를 “부끄러운 현실”이라 표현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각 후보의 30 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을 취임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지켜오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의석의 1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이 50 퍼센트를 차지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8 월 기준 47 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24 명이 여성이었다. 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2018 년 기준 남녀간 급여차이는 36.5 퍼센트로 전년 대비 2 퍼센트 증가했다.

## 아동

출생신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태생이 불분명하거나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률은 모든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생 후 1 주일 이내에는 입양을 금하고 있다.

아동 학대: 법률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5 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 년과 2018 년 사이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6.6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계도 캠페인의 확대와 아동 복지 신고 요건의 확대가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보건, 개발 서비스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연관된 1,095 명의 아동보육사들에게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5 월에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가 두 명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멍이든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CCTV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CTV 를 보유하고 영상기록을 최소 60 일간 보관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다.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동학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는 대신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벌금을 내는 편을 택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적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CCTV 영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영상기록에 아동에 대한 협박성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모는 이를 학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영상 기록에 예를 들어 두 명의 어린이집 교사 간의 대화가 들어 있다면 부모는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상의 혼인가능연령은 남녀 모두 18 세이다. 강제결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동 성착취: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13 세이다. 19 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7 월에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어려움을 악용하여 13 세이상 16 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성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13 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13 세 이상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죄는 5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타 처벌수단으로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있다. 법률은 아동 음란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생산 또는 소지하는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 만 원 (1 만 6,6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연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다크 웹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운영자인 손종우를 불과 18 개월 징역형에 처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10 월에 38 개국 관계당국이 223 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330 명 이상의 웹사이트 사용자들을 구속했다. 2018 년 3 월 1 심법원은 손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1 심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18 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 음란물 이용범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가벼운 선고, 벌금, 또는 집행 유예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1 월에 법원은 10 개월간 아동 음란물을 968 회 다운로드한 피고에게 300 만원 (2,490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가 초범이며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동, 특히 가출 소녀들은 온라인 모집을 포함한 성적 인신매매에 취약했다.

국제아동탈취: 한국은 ‘1980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 납치에 관한 연례보고서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providers/legal-reports-and-data/reported-cases.html>

## **반유대주의**

유태계 주민 수는 약 1,000 명이며,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거주자이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참조: [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http://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참조.

## **장애인**

법률은 신체, 감각, 지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고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2만 4,900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 조사 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전담하는 검·경 특별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은 계속해서 해당 법률을 무시했으며 구조 변경에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선택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성인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했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보고했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한 남성이 장애인전용택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남성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던 해당 남성을 3급 장애를 가진 것으로 분류했다. 성남시는 1급과 2급 장애인, 정신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만이 장애인전용택시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교통 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성남시가 해당 남성이 접근가능한 택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시는 거절했다.

중앙정부는 그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혜택 수혜가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학적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1에서 6등급까지 분류하는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 개정법은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개정법은 기존의 1에서 3등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의 4에서 6등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 분류했다. 모든 장애인은 과거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에서 3등급 장애인만 활용 가능했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심각한 도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은 휠체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휠체어접근가능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시의 조례가 개정법보다 느리게 변화한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휠체어택시사용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시 정부는 "해당 남성은 11월 시 조례가 바뀌면 장애인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및 민간 건물과 시설의 장애인 친화적 접근을 권장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장애인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2018 년에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립재활연구소 및 6 개 지역에서 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정부는 성인 및 아동 등록 장애인에게 연금을 제공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18 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경증 장애를 가진 18 세 이상의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제공했다.

장애 아동은 3 에서 17 세 아동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보육기관,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을 위한 장비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소수 국민/인종/민족**

국민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약 5,140 만명의 한국에는 2018 년 7 월 기준 230 만명 (33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10 월에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가 이 법안 처리를 주저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에 포함될 성소수자 권리 때문에 법안 저지를 원하는 힘 있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이주민과 귀화인의 상당수가 여성 배우자였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진정 사건의 대부분이 강제 추방 혹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보호소에 구금된 동안 발생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이주민 가정 아동들이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외모로 인한 따돌림을 경험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신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이주노동자, 배우자,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행위, 차별, 기타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군 형법의 '추행' 조항은 합의에 의한 군인 남성간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비정부기구는 병역법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8월 기준 군 형법상 "추행" 조항을 근거로 한 기소가 적어도 세 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해군이 상담을 한다는 미명 하에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했으며 적어도 한 건의 경우 다른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한 명의 군인을 조사한 경우가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조사관들이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했으며 동성애 관계의 증거를 찾기 위해 군인의 핸드폰을 뒤졌다고 부연했다. 해군은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군 형법과 국방부 정책에 따라 군기 문란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절반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군인의 범죄화는 전반적인 사회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92 퍼센트가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2018년 다수의 시위자들이 축제 참가자들을 공격한 후, 2019년 서울 프라이드 페스티벌에는 성소수자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3,000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다. BBC에 따르면 "전세계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는 경찰이 행사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내 비정부기구들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병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부속 건물에 적절한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HIV 양성 환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거절하자 시정명령을 내렸다. 환자가 소장을 제출한 후, 병원은 모든 보호 장비를 획득했으며 필요한 직원 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

## 제 7 절. 근로자의 권리

###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독립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엄격한 제한범위 내의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법률은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는 쟁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로 규정되는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 항공, 통신, 수도, 병원이 포함된다. 노조법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노동쟁의'에 관련된 당사자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제 3자 조정을 거치거나 노사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하는 파업은 합법이다. 법률은 '노동쟁의'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력감축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권에 관련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주주들은 쟁의 절차가 과도하게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할 경우 주도자와 참가자는 죄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은 노조 지도자가 노조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노조의 자체적인 조직 관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 또는 공직 선거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등 교육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조합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또한, 동법은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다. 노조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단체교섭 참가자에 대한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적법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을 전반적으로 보장했다.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추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를 거절하는 사업주를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된다.

민주노총 시위대가 근로시간 변경 법안을 심의 중이던 국회에서 의경들과 3개월간 대치한 후인 6월에 경찰은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했다. 1995년 민주노총 설립이래 정부는 다섯 명의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를 체포했다. 불법 집회 참가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후 2년 이상 복역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8년 5월 가석방되었다. 노조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징역형을 살던 세 명의 다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들도 같은 해 석방되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회사측에 의한 반노조 행위의 예로 사측의 지원을 받는 노조의 결성 장려, 조합원에 대한 감시, 위협, 부당한 압력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노조 와해 시도, 고용주의 특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하도급계약과 조합원 해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자 및 조합원 해고, 노조 지도자의 의욕을 꺾기 위한 한직 발령 등을 들었다. 특별보고관은 사용자가 노조의 권리를 용이하게 잠식하는 방법을 자문 받기 위해 노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추방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노조 활동 참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으나 강제 노동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처벌은 위반행위를 억지하기에 충분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취업비용 지불로 인해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인 채용 관행,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선들이 부산에 자주 기항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태워간다고 주장했다. 해외 비정부기구가 입수한 사진과 인터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었고 어선에서 일한 수년간 임금을 체불 받거나 저임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비정부기구들의 과거 보고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은 선원들이 한국인이 아니고 어선이 한국영해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뿐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해 왔으나 당해 연도에는 한국 및 외국 국적 어선 모두에서 벌어지는 인권 및 노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해경이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4 월부터 5 월 사이 법 집행 기관당국이 근로 계약서,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주노동자 대상 범죄, 임금 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 환경 조사를 도왔다. 또한 4 월에는 해당 조사에 연안어선만이 아니라 원양어선에 대한 정기 조사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해안 경비대는 6 월부터 7 월 사이 인권 침해 의심 사례 단속에 나선 결과 90 명을 체포했다. 조사관들은 해경이 인권 침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 결과 체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한국 국적 어선의 선장으로서 베트남 선원을 배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리고 표류하게 한 후 다시 배에 태웠다고 비정부기구는 전했다. 선장은 또 칼로 베트남 선원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했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배에서 밀려 바다에 빠진 선원이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하자 선주가 500 만원 (4,150 달러)를 요구했다. 2 월에 새로운 고용법이 시행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희롱,

성폭행, 폭행, 고용주/고용주의 가족/동료의 상습적인 폭언 등의 이유로 고용주의 허락 없이도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다. 중학교까지(약 15 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5~18 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을 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업종의 고용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속과 처벌은 전반적으로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마지막 연도인 2017 년에 2 건의 아동노동 관련 법률 위반 사례를 보고했다.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제 6 절 '아동' 참조)

###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법률은 고용이나 직업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언어나 HIV 혹은 기타 전염성 질환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제 6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은 차별 없는 근로 환경 구축, 여성 경력 단절 예방,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 등 3 개항으로 구성된 여성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지만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법률은 비공식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급여 등 혜택 수준이 정규직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2 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근무 기간이 2년이 되기 직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해고 관행은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태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2만여명이 7월 시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게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 (“파견 근로자”로 불림)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노출되었다. 비정부기구와 국내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큰 차별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그들의 고용 지위 때문이었다. 국제노동기구는 여성들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리한 지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HIV/AIDS 감염자,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차별이 있었다.

직장 내에서의 여성 차별은 여전했다. 평균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63 퍼센트에 불과했으며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은 출산 후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7월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블라인드 채용”법이 도입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고용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0 퍼센트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용주의 경우 최대 3천만원 (2만 4,900 달러)의 벌금 및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직자에게 가족관계, 출생지, 혼인 여부, 나이, 또는 재산 소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법은 또한 직무와 상관없을 경우 구직자에게 몸무게와 키를 묻는 것도 금지한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직장내 차별에 직면해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최장 체재 허용 기간은 4년 10개월로 이는 영주권 신청에 요구되는 5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이다. 비정부기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규정이 외국인근로자의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자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제 7.b 절 및 제 7.e 절 참조).

법은 한국 국적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차감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매달 164만원 (1,360 달러)으로, 한국인 선원의



최저 임금 대비 76 퍼센트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인 선원과 달리 외국인 선원은 이익금 배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법은 모집책, 대리인, 고용주, 관리인들이 “어떤 구실이든 간에” (제 7.b 절 참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직자나 직원으로부터 금전, 기타 귀중품, 또는 편익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들에 의하면 한국 국적의 어선 선주들이 정기적으로 외국인 선원들에게 5 천달러에 달하는 보증금 지불을 요구하여 이들의 이탈을 막고 있다.

### **E. 용인가능한 최저 근로조건**

당해연도에 최저임금은 2.9 퍼센트 증가했고 공식빈곤선 이상이었다. 정부는 대체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시행했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은 충분했다.

법은 2 주 기간 동안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매주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는 한, (일주일 52 시간까지) 특정한 날에 8 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특정한 주에 40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무제를 허용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2 주 동안 근무시간이 80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무를 적용한다. 수출가공구역내 외국기업의 경우 주 1 일 휴일을 적시한 노동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법은 일반 근로자의 주간 시간외근무를 12 시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대체적으로 모든 부문의 임금 및 용인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사업장내 사고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고, 위반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충분했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 특히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부문도 감독 대상이었다.

정부는 산업 보건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업계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고용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떠날 권리가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법의 시행을 책임지고 9 월 기준, 약 49,500 작업장을 점검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며 불시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단체들 역시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파악하는 현장조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시간외 근로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에는 징역과 벌금이 포함되어 있고, 위반을 방지하는데 대체적으로 충분했다.

일련의 규정들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대상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이 노동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계약직·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가 전체노동인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자·자동차·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있다.

고용허가제하 외국인근로자는 직장을 옮기는데 다수의 제약에 직면해있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3개월내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지위를 상실한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3개월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국은 해당자의 취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또는 건설근로자와 같은 계절근로자들에게 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직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람을 모집하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직이 더 어려웠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동안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3개월후 재입국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규정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전교육을, 이직근로자에게는 사업장적응교육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4 곳에 예산을 지원했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6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쉼터, 무상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콜센터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기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출입국, 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10 곳에 예산을 지원했다.

법은 국내에서 적어도 1년 근무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출국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했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은행규정이나 지급을 지연하는 고용주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시민단체들은 출국하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의 경우, 자신들이 맡은 사례 중, 밀린 임금을 받으려하거나 불충분한 퇴직금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주노동자가 80 퍼센트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63.5 퍼센트가 퇴직금 정산에 익숙하지 않았고 따라서 착취에 취약했다고 보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집에서 "대기중"이라 표시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려고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수가 많은 농업·축산업·어업의 경우, 법이 근무시간, 공휴일, 수당 규정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농업계 이주노동자들은 한달에 하루만 쉬기 때문에 문화교육강좌나 언어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문제제기했다고 한다.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외국인근로자가 현지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라는 형태로 고용주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여건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개선의 부족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러한 금지규정을 우회하여 플라스틱 판넬로 제작된 열악한 숙소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바지선 위 컨테이너가 숙소로 주어진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이같은 "기숙사"는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제대로 된 냉·난방이 미비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 회사는 외딴섬에 컨테이너를 두고, 근무교대 시 노동자를 섬에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다른 어선이 그 섬을 방문해서 3개월동안 고립되어있던 이주노동자를 탈출시키면서였다. 7월 정부는 고용계약 서명전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숙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가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이직을 허용한다고 진술했다. 고용노동부는 당해 상반기, 1700 작업장의 숙소를 점검했고, 수준미달의 숙소를 제공하는 작업장에 10개 시정명령을 내렸다.

1 월 정부는 2020 년 1 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에는 작업장 사망사고시 더 많은 벌금, 안전보건법 위반시 더 강화된 처벌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은, 납과 같이 유해한 중금속을 사용하는 도금작업 등, 위험한 특정 작업을 기업이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2018 년 12 월, 24 세 비정규직 청년 기술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후, 1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의 근무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규정과 달리 그는 홀로 밤샘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8 년 이후 주요 발전회사 5 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건 97 퍼센트, 사망사건 92 퍼센트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 년 산업재해 숫자는 102,305 (13.8 퍼센트 증가), 사망사건 숫자는 2,142 (2017 년 대비, 9.4 퍼센트 증가)이다. 1 월 정부는 유족에 보상을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면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다.